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	 금융감독원
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2016.12.21(수) 증선위(16:00) 의결 후		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유재훈(02-2100-2601)		담 당 자	윤송이 사무관 (02-2100-2517)	
	금감원 특별조사국장 강전(02-3145-5100)			김대준 팀장 (02-3145-5107)	

제 목 :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 첫 적발

1. 조치 개요

- ☐ 금융감독원은 일반투자자 A씨(남, 56세)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'16.12.21.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자 A씨에게 과징금 3,940만원을 부과하였음
-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가 시행된('15.7.1.)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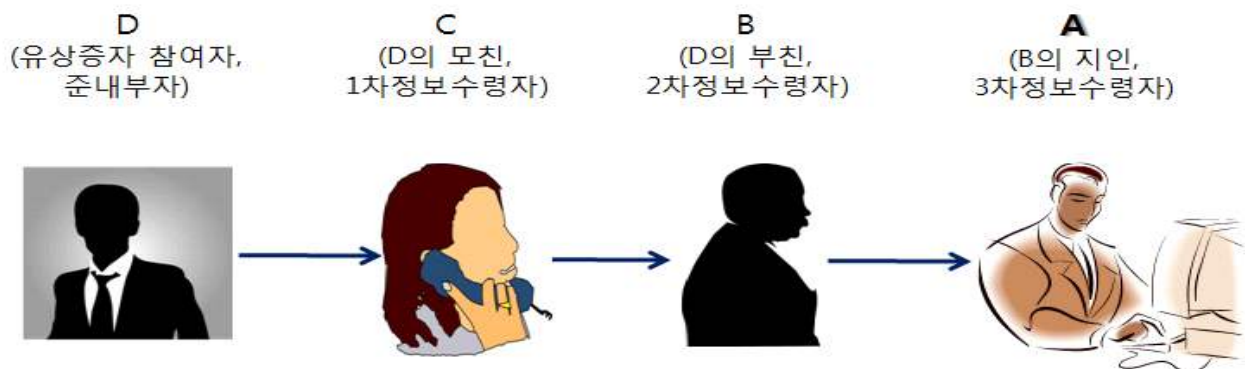
2. 주요 위반 내용

- ☐ 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(B씨)으로부터 듣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을 매수하여 3,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
- A씨는 甲사의 유상증자 실시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인 D씨(준내부자)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甲사 주식을 매수하였음
- 동 정보가 준내부자 D씨로부터 D씨의 모친 C씨(1차 정보수령자), D씨의 부친 B씨(2차 정보수령자)의 순으로 전달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에 해당됨

□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)을 적용하여 A씨가 甲사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음

※ 참고로, B씨는 甲사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고, 자신의 아들이 상장법인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A씨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으로 미공개정보 제공의 고의성이 없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음

정보전달경로



3. 투자자 유의사항

□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'15.7.1. 이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 되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매매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기 바람

① 미공개정보는 이용하지도 말고, 전달하지도 말자

- 상장법인에 관한 정보 또는 시장정보 등이 공개되기 이전에 들었을 경우에는 공개되기 이전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
- 또한, 타인에게 고의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절취·해킹 하는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

② 허수주문이나 잦은 정정·취소주문을 하지 말자

- 주식 등을 매매주문하면서 시장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 매매 주문(허수주문)을 하거나,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정정 또는 취소 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

③ 주식 등의 매수·매도를 동시에 하지 말자

-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제출하여 자신이 매도(매수)한 주식을 매수(매도)하는 경우 가장매매에 해당되고
- 타인과 짜고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하는 경우 통정매매에 해당되므로
- 이러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는 시세조종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

④ 풍문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말자

-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타인에게 퍼뜨리거나(풍문의 유포), 일반투자자를 오인 또는 착각 하게 하는 수단이나 계락을 사용(위계의 사용)하는 것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

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00-2608)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
 - 인터넷 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<http://www.cybercop.or.kr>) 접속
 - 전화 : 1332 또는 02-3145-5583, 5599, 5568, 5593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, <http://fss.or.kr>



□ 정보이용형 교란행위(자본시장법 §178의2 ①)

○ 규제 대상자의 확대

불공정거래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는 회사 내부자(임직원, 주요주주 등)·준내부자(인허가권자, 계약체결자 등), 1차 정보수령자만 형사처벌 대상임

⇒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2차 정보수령자, 3차 정보수령자 등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수령자가 주식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됨



⇒ 또한 해킹·절취·기망·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되어 거래에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됨

○ 규제 대상 정보의 확대

불공정거래의 미공개정보 이용에는 주로 상장법인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가 대상임

⇒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업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, 매매등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됨
[내부정보 + 외부정보(시장정보, 정책정보 등)]

□ 시세관여형 교란행위(자본시장법 §178의2 ②)

불공정거래의 시세조종 행위는 ‘매매를 유인하거나 타인에게 거래상황을 오인토록 하는 등의 목적’(매매유인의 목적성)을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에 형사처벌로 규제하고 있음

⇒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매매유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행위가 포함됨

① 대량 허수호가 제출 등 부당 시세관여

-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·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

② 가장매매를 통한 부당 시세관여

-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

③ 손익이전·조세회피 목적 통정거래를 통한 부당 시세관여

-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매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

④ 풍문유포, 위계 사용 등을 통한 부당 시세관여

- 풍문의 유포, 위계 사용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·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그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

□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: 과징금 부과

-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5억원 이하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1.5배 이내